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가. 개요

- 주 제: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 일 시: 2022. 11. 3.(목) 14:00~16:50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 및 해외 발표자는 웹 심포지엄으로 실시간 동시 진행
(<https://gafsc-seminar.kr>)
- 프로그램

[개회]

-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축 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국가별 주제발표]

- [발표 1]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최연식 교수)
- [발표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Manj Kalar)

[종합토론]

- 각 기관 관점별로 보는 우발부채의 범위
- [좌 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패 널]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Ross Smith IPSASB 국장, 국가별 발표자 5명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에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에는 관계부처, 국회, 학계, 회계전문가 등 국내 인사와 IPSASB, OECD 관계자, 필리핀 감사원 등 해외 인사를 포함하여 총 126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관리’를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심포지엄의 연속 시리즈로, 지난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우발부채’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을 짚어 보고, 우발부채 모범 관리국인 영국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 우발부채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의무로,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비재무적인 정보로서 결산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데, 미래에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여 재정지출이 현실화되면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양 기관은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활발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회사 및 축사〉



〈업무협약 체결식〉

개회식 이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맨지 칼리(Manj Kalar) 대표가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에 대해 각각 30분씩 발표하였다.



〈국가별 주제발표〉

이어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아이버 비즐리(Ivor Beazley) OECD 예산 공공지출국 팀장, 로스 스미스(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재정당국, 예산 심의 등에 있어 정부의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인 국회,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위험 식별할 수 있는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는 감사원, 발생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구성되었다. 공통적으로 토론자들은 우발부채의 중요성과 재정위험 현실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우발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금융,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확장된 관리가 필요하고, 재무제표 공시의 한계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고서 발간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

센터는 매년 11월 초에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며, 2023년에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를 주제로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웹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F8VnSa7OIlk>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3ILbEhmiJ_o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주제 및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p>◆ 한국 발표: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부채 관련 시장규율의 제약과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및 우발부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실무적인 어려움 등으로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해외 사례 국가들을 참고하여 우발부채를 '계량화'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우발사항 검토표 등을 활용하여 우발부채의 충실성·완전성 증가를 제안 	<p>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p>

주제 및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p>◆ 영국 발표: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감사원 보고서상 우발부채 현실화로 재정위험에 관심을 갖고, 2017년 이후 우발부채 승인체계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정부의 최후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따른 우발부채를 관리 중에 있음 • 우발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우발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 조직인 CLCC를 구축함 • 정부 부처 중 우발부채 비중이 높은 부처인 UK EF의 우발부채 관리사례를 모범사례로 제시함 • CLCC와 UK EF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우발부채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숙련 인력과 조직, 데이터 수집, 판단 기준, 일관성 및 명확한 정의 등 10가지 교훈을 제시하였음 	<p>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p>
<p>◆ 종합토론(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현행 회계기준보다 더 확장된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해야 함 • 현재 중앙정부 재정 대상에서 지방정부와 금융·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정부의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보험 및 약정으로 인한 우발부채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위험 관리가 필요함 • 재정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입장에서 우발부채 주석의 완전성을 강화시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예산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명확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설립 근거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 등도 우발부채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해야 함 • ISD 패소 확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발부채 관리를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국회 예산 심의 측면 등 다각도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우발부채 공시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에 위험을 파악해야 함 • OECD, IMF, IFAC 등 국제기구에서 먼저 우발부채 관리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영국의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고 실행 중인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와 유사하게 IPSASB도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 RPG라는 가이드라인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p>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p> <hr/> <p>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p> <hr/> <p>최성훈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p> <hr/> <p>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p> <hr/> <p>Ross Smith IPSASB 국장</p>

【발표 ①】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Korea cas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우발부채 현실화로 인해 공공부문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촉발할 사례가 다수 보고되며, IMF 등 국제기구도 GDP 대비 채무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우발부채를 꼽음
- 코로나19 이후 3년간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수지가 누적적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국가채무도 꾸준한 상승세에 있음
- 그러나 시장규율의 제약과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및 우발부채의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에 기인한 실무적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한국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한국은 국가결산서 주석 5번 항목에 우발사항과 약정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8개(계류 중인 소송사건, 담보, 파생, 지급보증, 중요한 계약사항, 천재지변 등, MRG, 기타)의 공시항목으로 표준화되어 있음
- 우발부채 공시 여부와 공시 수준 등은 개별 중앙관서의 실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우발부채는 2016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약 5개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1.31~2.06%에 해당함

»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해외 우발부채 공시 사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함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발상황의 발생조건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우발상황의 중대성 등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수립 가능하게 함

- 일반적인 우발부채와 별도로 정책, 제도에 따른 재정소요(순부담)를 공시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설정하여 초과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
- 우발부채 항목을 계량화하고 있으며 개별 사항의 개요, 우발적 요소, 진행 경과, 향후 전망 등 체계적으로 공시

»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공공기관 출자 및 출연 등의 항목을 추가 신설로 제안함
- 우발상황 주석에서 우발자산은 분리하고, 파생상품도 별도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
- 해외 사례국가들을 참고하여 '계량화'시켜 유형별 공시
- 우발사항 검토표(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우발부채의 충실성·완전성을 제고하고, '재무공시 품질대상' 등 인센티브 마련

[발표 ②]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UK case: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 영국 우발부채의 개요

- 영국은 우발부채를 보증, 배상, 소송, 구매자 보호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 분류하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발부채뿐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까지 추가로 개별 부처의 결산서와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공시함
- 한화로 영국의 우발부채는 약 750조원으로, 이 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614조원(2019~20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함
-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증제도(Government Guarantee Scheme) 상위 6개는 총 189.1조원이며, 이 중 28.8조원이 현실화되어 지출됨

» 우발부채 승인체계(Approval Framework)

- (승인체계 도입 이전) 먼저 부처별로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 수석 차관과 고위 공무원의 관리 감독 등을 통해 2차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시 이뤄지는 모니터링 관리체계하에 공공부문통합결산서 등에 공시됨
- (승인체계 도입 이후, 2017~)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정책담당 공무원이 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이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이 과정에서 재무부와 그 사업수행팀에서 위험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부채를 부담할 재정여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 1차적으로 재정 위험에 대해 부처가 책임을 지지만,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에게 채무가 분담됨
- 우발부채 승인체계는 5단계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신규 사업이거나 우발부채가 300만파운드 이상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사업인 경우 평가대상이 됨
-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위험과 이익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감당하는 민간부분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경험적으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됨



» 정부의 최종보험자 역할

- 승인체계 도입 이후 '정부의 최종보험자역할' 보고서가 발간됨.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우발부채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됨
- IMF, OECD는 암묵적 우발부채를 계량화하여 명시화하는 것을 권고함. 암묵적 우발부채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지 않고 정부 역시 공식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나,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말함

-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가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박한 우발부채의 식별 문제가 더 중요함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

- CLCC는 2021년에 설립되어 정부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우발부채와 관련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보증과 배상 부문을 다루고 있음
- 올해 CLCC는 전문가 검토 보고서인 *Exploring the UK Government's Contingent Liabilities*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금액은 2,160억 파운드 로 GDP의 9%에 해당하고, 집계된 326개의 우발부채 중 137개가 계량화, 189개가 비계량화된 우발부채임
- 2017년부터 임상 과실배상 등 민간부문에 청구된 부분은 17%에 해당하나, 청구된 것은 25건, 미청구는 58건으로 미청구에 대해서는 CLCC가 정부부처 등을 통해 개선할 예정
- CLCC는 향후 범정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수집, 중앙정부 데이터 통합,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을 목표로 함



» UK Export Finance(영국 수출 신용, UK EF)

- 1919년에 설립되어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보험이 부족하여 수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 중 재정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임
- UK EF는 최소의 위험을 설정하면서도 포괄적인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 프로파일 테일(Risk Profile tale)이 50억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 UK EF 보고서상 청구권 회수시기와 청구시기가 불일치하나 효과적으로 모두 회수하였으며, 금융·비금융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발부채 승인체제 규정을 준수함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CLCC 측면) 첫째, 데이터, 추정사항, 판단 기준, 편향(bias)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둘째, 우발부채 관련 일관성과 정의가 중요하고, 셋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지, 그리고 회계, 신용, 보험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UK EF 측면) 첫째, 우발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둘째, 보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셋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험을 이해해야 함

[종합토론] 각 기관 관점별로 보는 우발부채의 범위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한국 우발부채 범위(재정당국 입장)

-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인식과 측정 기준은 일반목적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목적으로, 일반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반면 재정통계는 정책결정자 등을 주요 정보이용자로 하고 있어 반드시 일반목적 작성에 적용되는 틀을 따를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우발부채 범위 논의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이용자를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
-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정당국은 회계 기준보다 확장된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중앙정부 재정으로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



» 영국 우발부채 관리 사례

- 영국의 공공부문통합결산보고서(WGA)는 단순히 공공부문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정부부처 개별 단위수준이 아니라 거시적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초 토대를 마련함
- 한국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의 효과가 보조금 또는 공기업 지원 등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재정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회계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함. 우발부채를 보다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측정 기준으로 일반 재무제표보다 업데이트된 재정관리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비금융공기업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 한국 우발부채 범위(국회 입장)

- 한국의 다수의 재정사업 등은 약 350개 여의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 공공기관의 총지출은 정부의 총지출을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함
- 즉 공공기관이 정부의 다양한 재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보험 및 약정으로 인한 우발부채는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재무제표 주석에 중앙관서의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100% 출자 중인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보증 등)는 공시하지 않음
- 따라서 미래 지출 유발 가능성 대응 측면에서 중앙정부에만 국한한 우발부채 관리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이는 제한된 세입 재원 내에서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사전적으로 위험 인지 및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우발부채 공시의 완전성

- 단년도 중심의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예산 편성과 심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올해 향후 10년 동안 4조원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이 편성됨
- 또한 200조원 규모가 소요되는 총사업비, 한국모태펀드의 정책펀드에 대한 약정,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황을 위한 정부지원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지출 가능성 및 추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함
- 현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보증채무를 중심으로 주석에서 공시하는 수준에 그치며, 개별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에 대해서는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 재무제표상 우발부채 주석의 완전성을 강화하고, 부처의 보증 및 보험사업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지급보증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도 정부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에 해당하고, 정부가 놓친 우발부채의 예시를 들며 이들이 결국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최성훈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

» 한국 우발부채 범위(감사원 입장)

- 한국은 우발부채를 소송, 지급보증 등 법령상 명확한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설립 근거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는 관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전력공사 등 다수 공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채의 경우 유사 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발부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우발부채 확대와 관련하여 우발부채 관리의 효익과 우발부채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우발부채 연계성 부족의 문제

- 우발부채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예산 심의 측면에서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함
- 예컨대 최근 정부는 이란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ISD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관련 예산(예비비) 부족 등으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태임. 그 외에 론스타, 엘리엇 등 다수 ISD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 만일 ISD 진행 경과에 따라 적절히 우발부채로 관리하고, 이러한 관리를 토대로 배상금 지급 재원을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는 등 확정된 배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였다면, 그로 인한 국가신인도 훼손이나 지연이자 등 국고 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최근의 한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의 보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현실을 지적함. 이런 유형의 우발부채도 국가결산서에 공시해야 함을 언급함. 즉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이유가 우발부채를 건전성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함

Ivor Beazle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

- 우발부채는 OECD 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민간부문의 대출 등 지원이 많아져 우발부채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위험과 재정지속성을 위한 공시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재무제표만으로 정부가 총 얼마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였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까운 미래에 또 언제 발생할지 혹은 금리 상승, 부채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채무불이행과 기후변화도 현실화되는 문제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함



» **한국 우발부채 범위(OECD 입장)**

- 향후 한국은 우발부채 공시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정부 특성상 민간부문과 달리 최후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는 계량화할 수 없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발부채는 계량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나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회계 측면 이외에도 더 구체적인 정보 공시 및 분석이 필요함
- 또한 그 위험에 관한 분석을 승인체계(approval framework)에 적용시켜 프로젝트(사업)의 시작에 앞서 미리 위험 파악 가능

- OECD, IMF, IFAC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발부채 관리 관련 모범사례를 계속 보여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뉴질랜드 또는 호주 등 선진 사례를 참고로 제안함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우발부채 관련 구체적인 정보 공시 및 그와 관련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공시에서 더 나아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국제기구들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

»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사례**

- 우발부채 관리와 정부재정 상태가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중 영국은 공공재정에 있어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음. 특히 WGA는 단순히 회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원천으로,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함
- IPSASB도 영국의 공공부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WGA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바 있음
- 영국은 우발부채를 단순히 회계적인 관리 차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경제, 통계 등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유용한 정보의 생산에 활용되며, 이렇게 생산된 정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 생각함



» **영국 우발부채 범위**

- 영국은 IFRS와 IAS 회계 기준을 넘어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까지 공시하고 있으며, 확대된 범위의 우발부채 정보는 공공재정관리 체계 측면에서 유용함
- 특히 희박한 우발부채를 포함하여 향후 우발부채가 더 이상 희박하지 않고 현실화되는 시점에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음

» 한국 우발부채 범위(IPSASB 입장)

-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공시하게 되면 재무제표 자체의 유용성이 떨어짐
- 그러므로 영국은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공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실행 중인 것으로 보임
- 영국 사례와 유사하게 IPSASB는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보고 가이드라인인 RPG 1(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1)이라는 권고안이 있음. RPG 1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재정상태표를 통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다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이때 우발부채의 현실화까지 고려함
- 이 국제심포지엄 이후에 많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우발부채 관리에 있어 영국이 모범사례 국가임에 동의해 주었으며, WGA(공공부문 통합결산서)를 통해 공공재정관리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함. 또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우발부채를 공시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을 넘어서는 IPSASB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언급함

[국가별 발표자의 답변 및 추가 의견]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 희박한 우발부채, 주석에 공시되는 우발부채, 그리고 충당부채는 결국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 관점에 있어 동태적인 연계과정으로 연결된 항목임
- 이 세 가지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같다는 점임. 이와 관련하여 세 항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 영국의 우발부채 승인체제는 새로운 우발부채 관리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 또한 회계 관점에서만 우발부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적어도 위험(Risks)을 미리 인식한다면 위험완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우발부채에 관심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함